

“분리발주는 불공정 하도급 등 건설 고질적 병폐 해결 최선책”

● 국회, ‘분리·분할 발주’ 관련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2013년 09월 16일 (월)

전송근 ✉ jsg@kosca.or.kr

책임시공으로 품질확보·예산절감도
가능
경제민주화에 필수... 금액 등 명시해
야

건설공사 분리발주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낫는 등 우리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분리발주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

서 민주당 김현미 의원과 이미경 의원 공동 주최로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공공 건설공사 분리·분할 발주’ 관련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시작 전부터 물려든 방청객으로 입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은 ‘분리발주 법제화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섰다.

홍 위원은 “통합발주는 고질적인 초저가 하도급과 불공정 하도급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도급제도 개선만으로 통합발주의 병폐를 해결할 수 없어 분리발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건설업계의 분리발주 반대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분리발주가 발주기관의 업무량을 증가시키고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분리발주는 소수의 일부 공종이 분리 발주되기 때문에 전기, 정보통신, 기계설비공사와 같이 발주기관의 업무부담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복합하자는 통합발주에서도 흔히 생기는 문제며 오히려 책임시공으로 품질 확보를 통해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분리발주는 고질적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할 수 있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며 특히 중소·지방건설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하고 국가계약법령에서 통합발주 원칙을 삭제하고 분리발주의 금액과 비율, 공종수를 명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시민단체, 정부를 대표한 토론자들도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는데, 가장 중립적 입장인 학계에서는 분리발주는 우리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자 시대적 요청이라며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분리발주와 함께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대책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전송근 기자



◇지난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공 건설공사 분리·분할발주 관련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에서 분리발주는 하도급 부조리 척결을 위해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건정연 홍성호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는 모습.